

## 언론사 세무조사

지난 2001년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는 연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부터 예고가 됐다. 김 대통령은 그 해 1월11일 연두회견 모두 발언에서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돼 있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지 20일 만인 1월 3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월 8일부터 60일 동안 중앙 언론사에 대해 정기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내용을 2월 1일 해당 언론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를 받는 언론사로는 국민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YTN 등 4개 방송사,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선정됐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인 1994년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가 합동 세무조사를 받은 지 7년 만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달 12일부터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

공정 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문 판매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행위, 불공정광고,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 “언론탄압용 조사” 대 “부패 언론은 처벌해야”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는 정치권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양상으로 번져갔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언론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對北)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언론탄압용 세무조사”라고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사도 영리기업인만큼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언론의 부패한 부분이 드러나면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는 그 해 3월 22일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경영과 관련이 없는 부장급 이상 기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신문사 지국과 보급소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5월 11일자 칼럼에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증권회사로부터 금융거래상황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특히 조사사실을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조회사실 유예 조치까지 국세청이 취하는 등 이런 투망식 조사를 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 국세청의 이례적인 조사결과 공개발표

이런 가운데 공정위 조사결과가 먼저 발표됐다.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일간지와 3개 방송사 등 13개 언론사에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동아일보가 62억원(이하 지국 포함), 조선일보 34억원, 문화일보 29억원, 중앙일보 25억원, 경향신문 19억원, 한국일보 16억원, 국민일보 15억원 이었다. 방송사별로는 SBS가 15억원, MBC 13억원, KBS 11억원 이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는 계열 인쇄회사에 인쇄비를 과다지급 하거나 자매지 인쇄를 해주고 그 인쇄비를 미수령 또는 지연 수령하는 방식,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해주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행위,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에 저가 매각 또는 고가 매입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계열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나 위탁용역비를 과다지급 하고, 계열사 광고의 무료 또는 저가 방송, 계열사에 대한 네트료 및 협찬광고수입 미징구, 계열사에 대한 인력지원, 건물 대관료 감면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고 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식발표하기 이틀 전인 6월 27일 조선일보 기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권력은 겉으로는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커튼 뒤에서는 이제 굴복하고 펜을 거꾸로 잡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 정권의 비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이런 압력이 먹혀들지 않은 데 따른 보복조치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142일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가 끝난 6월 29일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3곳의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한매일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3곳에 대해서는 법인과 탈루 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회계책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고발 대상에서 방송사와 경제지는 제외됐다. 국세청이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에 대해 총탈루소득 1614억원을 적발, 864억원을 추징했고 방상훈 사장에 대해 조선일보사 주식을 우회증여한 혐의로 고발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총탈루소득 1700억원을 적출, 827억원을 추징했고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

사장은 주식우회증여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로 고발조치 했다. 국민일보의 경우 총 탈루소득 536억원을 적출, 204억원을 추징했으며 조희준 사장에 대해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앙일보(1723억원 적출, 859억원 추징), 한국일보(525억원 적출, 148억원 추징), 대한매일(237억원 적출, 104억원 추징) 등은 법인만 고발했다.

### 3) 각 언론사 법적대응 선언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대부분 반론문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가 현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대주주가 이미 수 백억 원의 증여세를 내고 지분을 아들에게 넘겼는데 굳이 1.9% 밖에 안되는 지분을 ‘변칙·우회’ 증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은 점을 무시하고 국세청이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세청 발표 중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발표문 중에는 과장과 왜곡이 들어가 있다”며 “본사가 자금을 김병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계좌는 본사 명의이거나 관리국장 명의라서 자금세탁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국세청 추징 항목을 자세히 보면 추징세액을 늘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각종 경비를 무시하고 세금을 매긴 것”이라며 “특히 신문업계가 내부적으로 약속한 무가지 비율(전체 발행 부수의 20%)을 넘어서는 부수에 대해 접대비로 간주, 세금을 매긴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한매일(당시)은 “신문업계의 영업 특성과 법 적용상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징세액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4) IPI, 한국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와 법인 및 대한매일·중앙·한국일보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지검 특수 1,2,3부에 배당됐다. 언론사와 언론사주에 대한 두 달 가까운 조사를 마친 서울지검은 8월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한국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언론사주의 구속수감을 둘러싼 언론탄압 공방은 국제적인 무대로 확산됐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8월 8일, “언론 세무조사로 야기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비춰볼 때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요한 프리츠 IPI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검찰이 조선일보의 재무 회계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는 국세청이 언론사 간부들과 기자들의 은행계좌 추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동아·국민 등의 언론사주가 구속수감 되자, IPI는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즉시 포함시켰고 대표단이 방한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요한 프리츠 IPI사무총장은 9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해 앞으로 지속적인 언론환경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IPI의 브루스 브룩만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가디언 발행인과 닐스 오이노르웨이 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로저 파킨슨 세계신문협회(WAN) 회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곧바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으며 한국정

부가 ‘언론개혁’이란 미명 아래 독립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PI와 WAN의 조사단은 9월 5일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중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만났으며 5일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과 면담했다.

## 5) 드러난 언론 탄압 의도

그런 가운데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가 현 정권의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됐다는 내용이 담긴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의 책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가 출판되면서 여야는 다시 한 번 격돌을 벌였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진낸 성 기자는 책에서 “김대통령이 올해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한 수석비서관이 ‘우리가 언론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조선 동아 중앙은 길길이 떨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을 곧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성 기자는 또 “집권 직후 시민단체와 청와대 내부에서도 힘이 있을 때 언론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호남편중 인사 등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가 끊이지 않고 경상도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자 김대통령은 차츰 언론에 대해 신경질적이 돼 갔다”고 설명했다.

이 책을 놓고 야당은 “언론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음모에서 기획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정부를 공격했고, 여당은 “기자의 책을 근거로 세무조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받아 쳤다.

한편 법원은 “상당기간 재판이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된 언론사주들에 대한 보석결정에 따른 석방을 결정했다. 10월 25일에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11월 6일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11월 8일에는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이 풀려났다. 이후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2005년 6월 10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확정됐고, 김병건 전 부사장에  
 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  
 는 벌금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2006년 6월 29일에는 대법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  
 장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조  
 선일보 발행인에서 물러났다.

### 국제언론인협회(IPI)가 2001년말 발표한

### ‘세계언론자유 검토(World Press Freedom Review)’ 중 한국관련 전문

World Press Freedom Review

2001

South Korea

2001 World Press Freedom Review

Events in South Korea this year showed just how easy it is for politicians to make the media a scapegoat for their own failures. Once popular for its policies on national reconciliation, support for President Kim Dae-jung's administration plummeted in 2001 as it failed to deliver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welfare policies.

Over the last 12 months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has been constantly criticised by the media for its political performance. Stung by this criticism, the administration began to attack the media; a strategy that revealed a desire to control the press. Furthermore, although in November 1999 the president appeared to have accepted the view that changes in the media should come from within, by January 2001 he had changed his opinion.

In the traditional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11 January, the president said the press, the academic world, civic organisa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join forces to draft plans for a fair and transparent press reform. The announcement appeared to catch the independent media off-guard, while the state media provided vocal civic groups with a platform to present their views on reform and further cement their support.

By the end of March, the printed media had been forced to contend with a total of 10 different reform programmes and members of the ruling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C) were openly speaking of the need "to wage a war against the media". Subsequently, the government began to exert greater pressure on the printed media by employing a number of agencies to investigate it.

On 1 Februar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sent written notification of a corporate tax investigation into the affairs of 23 media companies in Seoul. The decision was made despite the fact that the agency had previously said it would restrict investigations because of a general business slump. Exactly one week after the announcement, the NTS launched a full-scale tax investigatio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also announced it would investigate the same companies with regard to "unfair practices and internal dealings".

In a protest written on 16 May concerning the investigations, IPI said, "the international press freedom community hopes to soon witness some positive signs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alter its present methods and work towards ending this controversy. Should this issue not be resolved in a democratic fashion, we would be forced to propose at the next meeting of the IPI Executive Board that South Korea be placed on the 'IPI Watch List'".

After an investigation lasting nearly 100 days and involving more than half



of all available NTS tax investigators, the NTS announced on 20 June that a combined fine totalling almost US \$400 million would be levied against all of the media organisations. In a move that affirmed the view that the tax investigation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publicised during a live broadcast on television.

Based on its own investigations, KFTC announced that 13 major media companies and their 69 subsidiaries would be fined approximately US \$18 million dollars for illegally “supporting their subsidiaries”. Three-quarters of the fines were levied against four newspapers regarded as “critical” of the government, the Chosun Ilbo, JoonAng Ilbo, Dong-A Ilbo and Munhwha Ilbo. Pro-government dailies received only 1 per cent of the total penalty.

The fines and back taxes levied on news media were so exorbitant that it placed most news media, especially smaller newspapers, under great financial strain. As a result, a number were prey to the mercy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n turn are often controll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actions to the investigations varied according to political allegiance. A number of civic organisations attacked any group or individual that criticised the government’s actions. The strident language of the civic groups was also matched by the words of politicians.

A parliamentarian from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Noh Mu-hyun, condemned newspaper and media companies as the “last dictators” and stated “the media is trying to maintain its privileged position and the party should respond frontally to counter this anti-democratic force”. MDP spokesman Jeon Yong-hak also condemned the media as “an anachronistic force protecting old-fashioned ideas and corrupted, privileged establishment”. When minister Oh Hong-keun, head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was

asked if he agreed with the labelling of 'media as dictators', he replied "some of them".

However, the media was not without its supporters. Head of the opposition, Lee Hoi-chang, president of the Grand National Party, called the tax audit unfair and biased. He also said it was unlawful to put pressure on newspapers by announcing the extremely exaggerated and inaccurate results of the tax audits.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reports that the government was following a pre-planned strategy to deal with the media. On 25 June, Chosun Ilbo acquired a document titled the "Response to the Tax Investigation of Media Companies", prepared by the MDP's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and circulated at a high-ranking party meeting.

The document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urrent situation was to "distance the party from the investigations" and emphasize that the MDP was not involved. It ordered members to refrain from mentioning the probes in conjunction with "media reform."

It noted that the issue of arresting newspaper owners "would be finalized within two to three months" and so the MDP should tell people "critical reports by some media companies were biased and that they were confronting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he document said the party "should use" civic groups to argue that the results of the tax probe should be made public (which is illega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other calls for the voluntary release of results by some media groups, "to pressure other media groups to publish their fines." It also stated that the public credibility of some newspapers would be destroyed.

In another expose on 24 July, documents from the ruling MDP titled,

“Activitie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Tax Investigation of the News Media”, were published by the Chosun Ilbo.

The documents outlined the “arrest” of the owners of news media companies, despite the fact that, until then, the only public mention of anything happening to company owners had come from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who said some of them would be “indicted”. At the time, no news companies had been formally informed of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d no owners had been indicted by the prosecution.

On 29 June, the NTS requeste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PPO) to indict newspaper companies and their owners/managers on criminal charges of tax evasion. In early July, the PPO began full-scale investigations, summoning newspaper staff, management and finally the owners and publishers, particularly from the largest print media.

On 17 August, judges allowed prosecutors to arrest the president of Chosun-Ilbo, Bang Sang-hoon, the former honorary chairman of Dong-A Ilbo, Kim Byung-kwan, and the former president of Kookmin Ilbo, Cho Hee-joon, stating that they might flee or destroy evidence if allowed to remain free. The prominent media figures were placed in cells measuring 3.63 sq. metres and kept in solitary confinement.

Once the three media owners had been confined, the prosecution started collecting new evidence to file additional charges. Officials at the Seou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said they were considering adding new criminal charges, capital flight and breach of trust, to the standing charges of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The prosecution was also reportedly collecting information on three to four senior journalists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the media tax evasion cases, e.g. Kim Dae-joong, editor-in-chief of the Chosun Ilbo, a harsh

critic of government policy, refused to comply with the initial summons, claiming “it is intended to malign me”.

On 4 September, the Seoul District Prosecution Officer indicted 13 owners, representatives and managers of six newspapers alleging they had committed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Responding to the worsening situation, IPI and the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WAN) carried out a joint mission to South Korea from 5-8 September 2001. The members of the joint mission were Johann P. Fritz, Director of Vienna-based IPI; Roger P. Parkinson, president of Paris-based WAN and chairman of The Globe and Mail, Canada; Nils E. Oy, secretary general of the Association of Norwegian Editors; and Bruce B. Brugmann, member of the IPI American Committee and editor/publisher of the San Francisco Bay Guardian.

The joint IPI/WAN mission set out two specific objectives, first to announce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IPI Executive Board to place South Korea on the “IPI Watch List”, and seco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is harassment while exploring how Koreans can work to protect independent media from government intimidation and control.

President Kim Dae-Jung refused to meet the IPI/WAN delegation investigating government action against the South Korean press. “The government decided to disallow the meeting with president Kim as we have found IPI is working for the interest of news media owners under the pretence of press freedom,” presidential spokesman Park Joon-Young told journalists.

During the mission, the delegation met leading journalists, media owners and politicians. On the basis of their investigations the delegation agreed the situation warranted the inclusion of South Korea on the “IPI Watch List”. As a

result, the mission made a public announcement that the country had been placed on the list where it joined Russia, Sri Lanka, Venezuela and Zimbabwe.

Aside from the “IPI Watch List,” the delegation unanimously agreed that the NTS had violated the Korean law by disclosing the result of the tax probe to six news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the NTS targeted the three big privately owned newspapers which had been the biggest critics of President Kim’s policies. Its announcement of the result was broadcast live on all TV stations, which IPI and WAN believe was an attempt by the government to paint the news media as criminal even before trials began.

In addition, the delegation stated the jailing of the three media owners for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occurred prior to their trials. Therefore, it prejudged their guilt. According to Korean law, no one should be incarcerated unless the accused falls into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accused has potential to flee; the potential to destroy evidence or the potential for conspiracy with others.

Concerning this matter, IPI said, “The IPI and the WAN, as well as many respe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yers, believe that the three media owners do not fall into any one of these categories.”

Finally, the delegation of the mission expressed its disappointment that, “despite the appeals of IPI, WAN, and many others, three media owners were jailed contrary to usual practices. The IPI/WAN delegation visited them in jail and was heartened by their confidence that the truth would prevail in the end.”

In October and November, there were signs that the pressure applied by IPI and WAN was having its desired effect when the three imprisoned media owners were released. On 25 October, Kim Byung-kwan of Dong-a Ilbo was released, while on 6 November, the Seoul District Court granted the immediate

release of Bang Sang Hoon of the Chosun Ilbo on bail of US \$23,000. When ordering his release, the court said there was no risk of flight 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 argument that IPI had used since Bang's arrest on 17 August. Choo Hee-jun of the Kukmin Ilbo was released on bail on 8 November.

Despite the release of the three media owners, the last 12 months have shown that, with the tacit support of Kim Dae-jung,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prepared to set aside its claims to espouse democratic virtues in order to pursue an agenda that suppresses the media.